

4년전과 닮은꼴 선거

6·4지방선거의 국내 상황이 4년 전 치러진 6·2지방선거 때와 쌍둥이처럼 '닮은꼴'이어서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침몰과 천안함 침몰이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발생을 기점으로 '여당 우세' 열기가 꺾이면서 야당에 유리한 구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의 대처 자세를 비롯해 사회적으로는 대규모 교사 징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따른 반쪽짜리 5·18기념식, 무소속 돌풍,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공천 잡음 등까지 일치하는 점이 수두룩하다.

◇지방선거 앞두고 천안함·세월호 침몰=제5회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해군 장병 40명 사망, 6명 실종)했다. 당시 야당은

제50주년 4·19기념식에 참석해 웃는 얼굴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눈물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참패 했고, 정치권에서는 참패의 한 원인으로 이 대통령의 눈물사건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연이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시점상 꼭 한 달 뒤인 지난 19일 세월호 침몰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하던 중 눈물을 흘렸다.

박 대통령의 눈물을 놓고 여당은 "진정한 사과의 말씀"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사과는 짧고 눈물은 길었다"고 평가가 절하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 이후 눈물 연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눈물 담화문이 이번 6·4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2014년 6·4 지방선거

4월 16일 진도서 세월호 침몰
박대통령, 한달만에 대국민 사과서 눈물
5·18 기념식 '임 행진곡'으로 파행
새정치 공천 잡음...무소속 출마 돌풍
지지율, 與 하락·野 제자리...무당파 상승

무능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안보위기를 앞세워 보수층을 결집했다. 결과는 천안함 침몰 전 여당 우세 분위기가 침몰 후 야당 우세로 바뀌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 7명, 한나라 6명으로 야당이 승리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지방선거도 선거전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직전 60%를 넘나들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세월호 침몰과 함께 40%대까지 추락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올해 선거는 제5회 지방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4년 전 지방선거와는 달리 야권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뚜렷한데도, 야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되레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만 상승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4년 전처럼 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편, 국가의 안전시스템 부재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뒤 치러지는 이번 6·4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4년 전의 '안보'공약 대신 '안정'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던 제5회 지방선거에선 '안보공약'이 난발하는 현상을 보였다.

◇대형사고 후 두 대통령의 눈물=제5회 6·2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2010년 4월 19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연설에서 천안함 장병 46명의 이름을 호명하던 중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훔쳐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알이 밝혀내고, 그 결과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연설 후 곧바로 이어진

2010년 6·2 지방선거

3월 26일 백령도서 천안함 침몰
이대통령, 25일만에 눈물 연설
5·18 기념식 반쪽 행사·교사 징계
민주당 공천 잡음·무소속 돌풍
與 치솟던 지지율 하락... 선거 참패

◇공천 잡음 이어 무소속 돌풍까지 판박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잡음은 4년전이나 올해나 여전하다. 제5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의 공천방식에 반기를 들고 '민주당의 텃밭'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는 일마저 발생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29명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무소속 당선자는 광주 1명, 전남 7명 등 8명이나 됐다.

제6회 지방선거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자 991명(교육감 제외) 중 무소속 출마자는 391명(39.5%)에 이른다. 특히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의 무소속 돌풍은 '대통령급'이다. 당 지도부는 시장후보로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 했지만, 이에 반발해 탈당한 강은태·이용섭 후보가 강 후보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이고 있다.

◇5·18기념식 반쪽 행사·대규모 교사 징계=제6회 지방선거를 2주일 여 앞두고 열린 5·18민중항쟁 기념식도 4년 전과 흡사하다. 5·18 30주년 행사가 치러졌던 지난 2010년 5월 18일 5·18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항의해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불참했고, 행사는 결국 반쪽짜리가 됐다.

4년 뒤에 치러진 올해 5·18기념식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문제로 5·18 관련 단체는 물론 유족, 야당 등을 비롯한 대통령도 불참하면서 지난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초라한 행사가 됐다. 이와 함께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24일 정부는 특정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34명의 교사를 파면·해임해 전교조 등 야권 성향의 단체를 자극했고,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올해도 정부는 지난 14일 세월호 등과 관련해 대통령 정권퇴진 운동을 선언하는 글은 쓴 교사 43명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전교조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진표기자lucky@

20명 이하에 문자·SNS서 지지자 홍보 가능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범위

"○○○후보를 도와주세요. 그를 지켜냈지만 한 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를 추천합니다. 제가 믿는 □□□가 꼭 당선될 겁니다."

광주시장은 물론 전남 각 시장·군수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 대 무소속의 대결로 '박빙' 양상을 띠면서 유권자들의 휴대폰에는 후보 지인이나 지지자들의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자는 주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소위 '무늬만' 일반 유권자들이 보내는 것이다.

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불법은 아니다. 20명 이하에

후보자와 동일 옷 착용 안돼

수당·실비 받으면 처벌 대상

계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할 수도 있다. 또 전화, 공개연설, 대담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에게 지정을 받아 명함을 배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후보자와 동일한 옷이나 소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의 금지 사항은 있다. 선거운동원과 같이 수당과 실비를 보장받게 되면 '매수'나 '이해유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순수 자

원봉사로 선거운동에 관여해야 하며, 다만 후보자가 동행할 경우 5명 이하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 식사를 할 수는 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유권자의 대부분은 후보자 측근으로, 순수 유권자와 구별된다"며 "운동원으로 등록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추후 법적인 책임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유권자 신분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선거운동원의 경우 동일한 복장이나 소품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선관위의 단속에 쉽게 노출되고 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비용 3분의 1 이상을 지출하는 사무원 등 이른바 '중책'을 맡을 경우 공직선거법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경다리 대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왼쪽 두번째)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사이에 두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정비 4년에 한번 결정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매년 열리는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세 의원 선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광역 시·도 의회와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어지던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

관피아 금지 '안대희법' 발의

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이 추진돼 제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 내에서 올릴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뿐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지자체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박영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7일 전라남도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 "제2의 안대희"가 나오지 않도록 최근 2년간 관피아(관료 마피아) 권력이 있는 사람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이른바 '안대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명한 것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면 총리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131226-중-5229호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 밝은광주안과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아룽기공주식회사 사원모집

당사는 40년 전통의 오일펌프 전문 제조업체로서 국내 및 수출증가와 해외 법인 성장에 따른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모집부문	모집분야	인원	자격요건
관리직	기술	경력,신인 약간명석	기계설계(컴프)가능자 및 경력자 우대
	품질		기계(컴프)분야 경력자 및 일어가능자 우대
	영업관리		여직원, ERP가능자
	생산기술		MCT,CNC관리 유경험자 (회직자 시간제 근무 가능)
생산직	수행기사		수행 경력자 우대
			참고 정리 및 수출품 포장

2.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단에 응시분야 및 희망 년봉 표기)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E-Mail (r3714@nate.com) 접수

4. 급여조건 : 당사규정 및 본인 면접후 결정

5. 복리후생 : 4대보험, 주5일근무, 상여금500%, 각종경조비지급, 중식제공,통근버스(광주)운행

6. 제출기한 : 2014. 5. 28 ~ 2014. 6. 10

7. 근무지 : 본사 담당 공장 (동광주 IC에서 20분 거리)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기획본부 (061-380-2201) 문의요함

아룽기공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소로 48 (우 : 517-811)
Tel:061380-2200 Fax: 382-3094